

# 4차산업혁명 시대 人文學의 展望\*

— '材'와 '不材'의 사이 —

魏幸復\*\*

## 目 录

1. 들어가는 말
2.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인문학
3. 문화산업과 인문학
4. '材'와 '不材'의 사이
5. 맺는 말

## 1. 들어가는 말

동아시아에서는 '人文'이 '天文'과 대비되면서 인간 세상의 질서나 인간이 만들어낸 문물을 가리키는 개념이었으며,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의미했다. 漢字 '文'은 본디 '무늬'를 가리키는 글자 '紋'과 통용되었고 秩序와 調和의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人文' 개념은 인류가 창조한 문화 중에서도 선진적이고 핵심적이고 건장한 부분을 의미한다. '人文學'이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精華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학문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 본 논문은 2017년 11월 11~12일에 걸쳐 개최된 '2017년도 한국중어중문학 추계연합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제4차산업혁명과 인문학의 출로 - '材'와 '不材'의 사이」를 바탕으로 하되, 최근 몇 년간 비학술성 잡지나 토론에서 필자가 밝혔던 생각들을 종합한 결과임을 밝힌다.

\*\* 漢陽大學校 中國學科 教授

서구의 인문학은 그리스의 ‘파이데이아’(paideia)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젊은 이들을 건전한 시민으로 키워내는 과정을 의미했다. 로마제국에 들어서자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에 의해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을 지닌 후마니타스(humanitas)로 파이데이아 개념이 번역되었고, 지금도 ‘humanities’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서구의 인문학은 건전한 교양인을 양성하는 교육으로부터 출발한 것인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자 인문학이 고대의 인간관을 계승하고 인본주의와 계몽주의를 파생시키면서 근대를 열었다.<sup>1)</sup>

동서양을 막론하고 학문은 ‘인문’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부터 비롯되었고, ‘인문학’은 인류문화의 精髓를 바탕으로 삼아 건전한 인간 혹은 시민을 양성하는 학문으로 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은 인간 존중의 원리를 탐구하면서 ‘바람직한 인간’ ‘존엄스러운 삶’ ‘사람답게 사는 세상’과 같은 명제에 관심을 두어 왔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에서는 모두 인문학이 발전되었음을 보면, 인문학이 정치적·경제적 발전의 선결요건이며 물질적 풍요까지도 가져다준다는 점을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주목하는 세상은 늘 인문학을 홀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0년대부터 ‘인문학의 위기’를 경고했지만 대학인문학의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인문학에 대해 공전의 관심을 모이고 있는 지금의 대학바깥의 상황에 대해 대학인문학이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도 않는다.

이에 스스로의 본령을 지키면서도 급변하는 시대와 그 요청에 주목함으로써 인문학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개척할 길이 있는지를 토론해보고자 한다.

1) 서구의 인문학 개념에 대해서는 『문학비평용어사전』(2006. 1. 30., 국학자료원)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721&cid=41799&categoryId=41800>

## 2.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인문학

한국의 경제규모는 2017년에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올렸고 계속 그 순위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지만<sup>2)</sup>, 한국인들의 삶의 질은 여전히 열악한 단계에 처해 있다. OECD가 2017년 8월에 발표한 ‘2016 국가별 행복 지수’에 의하면, 38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한국의 순위는 28위에 불과했으며, 자살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sup>3)</sup>

자살문제와 관련된 국제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한결같은 한국의 순위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13년 연속 OECD 1위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80만명 중 78%는 중·저소득국가 국민이다. 반면 1인당 GDP 3만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은 자살률에서만큼은 앙골라·시에라리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경제력과 삶에 대한 의지의 불균형은 한국사회를 떠받친 고성장의 어두운 뒷면을 드러낸다.<sup>4)</sup>

고도의 압축적 성장 과정을 통해 지금의 경제적 위치를 확보했지만, 지난 몇 십 년 동안 물질적 성장을 우선적 과제로 삼으면서 살아 온 결과, 사람들이 혹독한 경쟁 속에 놓이게 되었고, 다수가 자존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문학까지 위기 속에 방치됨으로써 패자로 남은 사람들이 열패감과 소외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2) 「한국경제 2032년에 세계 8위…중국은 미국 제치고 1위 등극」, 『중소기업뉴스』 2018.01.01.

한국경제 규모가 14년 뒤인 2032년에 세계 8위까지 뛰어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7년 12위인 한국 경제는 2022년에 가면 캐나다를 밀어내고 10위로 올라선데 이어 2027년 9위, 2032년에는 8위로 한 계단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3) 「OECD 자살률 13년째 1위… 불행한 한국사회」, 『시사위크』 2017.10.02.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97421>

4) 上同

지난 9월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발표한 도시지역 자살자의 심리부검 결과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설명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발표에 따르면 자살자가 발생하는 제1원인은 정신질환(60.9%)도 경제적 문제(55.0%)도 아닌 '사회적 관계 손상'이었다. 169건의 자살사례 중 86.8%가 단절된 인간관계와 지역 사회에 대한 부적응문제를 경험했다. …… '필요한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OECD 평균 90%에 달했던 반면 한국의 경우 77%만이 같은 대답을 했다.<sup>5)</sup>

'사회적 관계 손상'이 자살의 제1원인이라는 분석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가 심각하게 붕괴되었음을 알려주는데, 다른 통계를 보아도 우리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층과 노인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중장년층에서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숫자가 가장 많다는 통계가 그 증거이다.

10~30대 사망원인, 40~50대 사망자 수,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원인 1위가 모두 자살이다. …… 이는 국가와 사회가 자살을 방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에서 유독 자살률이 높은 원인으로 성공지상주의와 과도한 경쟁, 과중한 업무와 급격한 사회변화 스트레스, 청년실업률 증가, 준비 없는 중장년층 퇴직, 가족 해체, 유명 연예인 모방자살 등이 꼽힌다. 사회가 생애에 걸쳐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부추기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상당히 미흡하다. 일례로 올해 복지부에 편성된 자살 예방예산은 99억원이다. 자살률 2위를 기록한 일본(7천508억원)의 1.3%다.<sup>6)</sup>

성공지상주의와 과도한 경쟁, 과중한 업무와 급격한 사회변화, 청년실업률 증가, 퇴직의 압박, 가족 해체, 모방자살 등을 자살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절감하게 하는 항목들이다. 청소년층은 자신이 사는 나라를 '지옥'에 빗대고, 노년층은 소외감과 절망을 극단적 선택으로 마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할 정부예산의 미

5) 上同

6) 「자살 예방의 날」, 『경기일보』 2017.09.11.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92965>

미흡은 여전히 개선된 상황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경제규모가 계속 커졌지만 우리나라는 15년여에 걸치는 세월이 걸쳐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스러운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소득 수준이 더 높아진다고 해도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미래가 더 어둡게 느껴진다. ‘과학입국’의 시책이 경제적 성장에 공헌한 것을 인정하지만, 정신적 영역을 담당하는 학문을 홀시해 온 국가정책의 일대 전환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에 의해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이 기계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소외의 확대 문제가 활발히 공론에 부쳐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용어를 제기함으로써 인류의 앞날에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킨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기술의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불평등의 심화와 소외의 확대를 미래 사회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면 이러한 구조적 변화로 인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지도 모른다. 로봇과 알고리즘이 점차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고, 투자는(더 정확하게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사업을 할 때) 자본 집약성이 완화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장은 전문적 기술이라는 제한된 범위로 더욱 편중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과 시장은 소수의 ‘스타’들에게 지나치게 큰 보상을 주게 될 것이다.<sup>7)</sup>

인공지능의 발전과 기계의 활용이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간을 힘들고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이는 과학기술 분야가 인류사회에 기여한 공로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인간을 생산적 노동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하거나 소외를 확대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7)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지음, 송경진 옮김,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서울, 새로운 현재, 2016년) 148- 149쪽

정보기술의 발전이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창출할 혜택을 소수의 개인이나 기업이 장악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진전되면 생물학적으로도 심한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의학 발달의 혜택이 부유한 소수에 게만 집중되고 그들만이 오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을 뛰어 넘는 불평등의 가능성도 묵과할 수 없다. 존재론적 불평등은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수용하는 사람과 저항하는 사람 그리고 물질적 승자와 패자로 갈라놓게 될 것이다. 승자는 제4차 산업혁명의 특정 분야(유전 공학과 같은)로 가능해진 인간의 근본적 개선에서 오는 이점을 누리게 될 수도 있지만, 패자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종류의 계층 간 갈등과 충돌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sup>8)</sup>

정보기술의 발달이 개인들의 정치적·문화적 자유를 신장할 수도 있지만, 기술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이나 자본에 의해 대다수 사람들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는 우려도 없지 않다. 고도의 안면인식 프로그램과 카메라 등 빅브라더(big brother)의 출현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술력이 이미 등장했는데, 이러한 기술이 악용되면, 대중은 편리함을 제공받는 과정을 통해 개인적 영역을 거의 노출당하거나 정밀한 감시망 속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기술의 결합을 활용해 정부와 기업의 활동에 투명성을 요구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개인 그룹을 진압하거나 탄압하려 할 수도 있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실제로 정부가 시민사회 그룹의 독립성과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법과 정책을 마련하면서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건강하고 열린사회에 어긋나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sup>9)</sup>

인간의 미래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분야는 기술의 발전

8) 上同 157쪽

9) 「2016년 세계 위험 보고서」, 上同 155쪽

을 급속도로 진전시키고 있으며, 또한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유지하려면,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려면 인문학적 사유의 발전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투여되어야 한다. 인간이 기계와 대면하고서 계산능력을 겨룬다면 삼류컴퓨터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인간이 기계와 비교되어서는 안 되며, 인공지능이 인간을 보조하는 수단이 되도록 하려면 인간존중의 이념과 사회구조를 창출해야 한다.

고도로 정밀한 기계들이 운용되는 사회에서도 인간을 억압하거나 인류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결국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자유를 신장하고 인간을 해방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토대가 되도록 하려면 인류 스스로 삶의 가치와 목표를 디자인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과 가치의 문제로 좁혀진다. 문화와 국가, 소득계층을 넘어 모두가 제4차 산업혁명과 그것이 가져올 문명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배워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인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인간에게 힘을 실어주는 새로운 과학기술은 결국 사람에 의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도구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모두를 위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10)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가치로 귀결된다. 우리는 미래를 만들되 사람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미래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 4차 산업혁명은 인간 본성의 정수인 창의성·공감·헌신을 보완하는 보완재의 역할을 하며, 우리의 인간성을 공동 운명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둔 새로운 집단적 윤리의식으로 고양시킬 수도 있다. 후손들의 번영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다.<sup>11)</sup>

‘인간의 존엄’에 대한 토론과 실천이 삶의 근간을 형성해야 할 세상이 올

10) 上同 260-261쪽

11) 클라우스 슈밥,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기회」, 『4차 산업혁명의 충격』(클라우스 슈밥 외 26인 지음, 김진희 손용수 최시영 옮김, 서울, 흐름출판, 2016.) 28쪽

것이다. 기술의 힘을 빌려 인간이 힘들거나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면(배제가 아닌), 인간이 생존을 위한 물질적 생산 과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삶의 의미와 가치의 창출'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을 더욱 자유롭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인류의 선택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社會的 安全網'의 구축에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것인데, 기술발전의 열매를 고루 분배할 도덕적 기준과 사회구조의 창출은 인문학적 대안의 제시와 실천을 요구한다. 우선적인 과제는 '기술과 기계의 발전에 의한 인간소외'의 극복일 것이다.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재교육시키는 방법이 있다.<sup>12)</sup>

그러나 제반 상황을 감안하건대 노동자들의 재교육은 단기적인 처방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매우 빨리 진행되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상당 정도의 정밀함이나 판단력을 요구하는 노동에 있어서도 인간을 대신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인류가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고의 확산과 제도의 수립, 즉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을 서둘러야 하며, 인문학이 '제도의 구축'이라는 실천까지를 시야에 두어야 한다.

사회적 안전망은 인문학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가치들을 기반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데, '調和'와 '共存'을 추구해 온 東亞 지역의 인문학으로부터도 미

12) 미국 정부는 2016년 12월에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인공지능이 활성화될수록 대다수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여가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과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역량으로 아래와 같은 방침을 제시하였다.

전략1: 가능한 한 많은 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개발

전략2: 미국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미래의 일자리에 대비

전략3: 성장의 과실을 나누도록 전환기의 노동자를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



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적 원리를 발굴해낼 수 있다.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인식체계가 개인의 주체성이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 점을 미리 경계한다면 조화로운 공동체 실현의 원리로 계승될 수 있을 것이다. 仁·義·禮·智·信과 같은 儒家的 德目이 인간해방의 원리가 되도록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학계의 몫이다. 解體와 顛覆을 꿈꾸었던 道家的 世界觀을 평등한 세상을 만들거나 활달하고 창조적 발상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로 발전시키는 것도 중국학계의 몫이다.

삶의 목표와 희망을 일깨우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인문학의 중흥이 절실하다. 인문학은 그것을 공부하는 개인에게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그 효과가 비물질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삶의 저변을 맥맥이 흐르면서 인류사회의 근간이 된다. 인문학은 부자들의 사치재가 아니며, 소박한 시민들을 위한 학문이고 배움이어야 한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 구현과 인간의 존엄성 유지가 인문학의 우선적 과제이다. 인류 문화의 정수를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 3. 문화산업과 인문학

‘文化’의 사전적 의미는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 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인류가 이루어낸 모든 산물을 담은 개념으로서 관습이나 규범까지를 포괄하는 총체적 생활양식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특정의 문화는 그것을 창조해 낸 집단의 관습이나 가치 및 전통 등등을 담고 있고, 그 집단의 상징체계이고 생활양식이며, 그 집단의 구성원은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질서와 규범으로써 타인과 상호 작용하고 소통한다.<sup>13)</sup>

13) ‘문화’의 개념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를 주로 참조하였음.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를 습득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집단에 대한 귀속을 확인하게 된다. ‘한국문화’는 한국인이라는 집단이 창조하고 공유한 문화이고 한국인에게 교육되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집단의 보존은 물론이요 지속적 발전까지를 돕는다. 즉 한국의 말과 관습과 역사 등등을 한국인이라는 집단이 함께 창조하고 공유하고 계승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름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존속시키고 국민적 결속을 도모하는 것이 한국인문학의 영역이다. 본래적으로 ‘國學’의 성격이 강한 인문학 진흥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교통과 통신 수단이 고도로 발달된 지금의 세계에서는 이질적 문화의 충돌과 융합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국 문화의 발전과 정체성 보존 그리고 파급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소프트파워(soft power)’<sup>14)</sup>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아울러 문화산업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소프트파워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면, 그 무형적 요소의 원천적이고 핵심적 자리에 있는 인문 역량,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빠르고 광범하게 유통되면서 자국문화 확산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는 문화산업과 문화상품의 발전에 배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sup>15)</sup>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문화상품의 최종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인문적 소양과 상상력이다. 인문적 상상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창조력이 성패를 가름하는 것이다. 기초과학의 발전이 기술 발전의 전제조건이라면, 인문학의 진흥은 문화산업 발전의 선결조건이다. 인문 영역을 핵심적 국가자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4876&cid=46634&categoryId=46634>

14) 군사력이나 경제제재 등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힘인 하드 파워(hard power)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강제력보다는 매력을 통해, 명령이 아닌 자발적 동의에 의해 얻어지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조지프 나이(Joseph S. Nye)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두산백과』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0409&cid=40942&categoryId=31614>

15) 문화상품이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정신 영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화상품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관심과 기여가 인문학의 본령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文化享有는 여가선용의 중요한 영역인데, 大衆文化의 시대를 맞아 문화는 이미 산업과 결합되었습니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여가의 확대와 더불어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창구효과(Window effect)를 통해 다양하게 변형되고 재활용되는 ‘원소스 멀티유즈(one-source multi-use)’의 특징을 지닌 문화산업은 기술과 매체의 발전에 따라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산업은 그 市場이 세계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파워와 국가브랜드의 핵심적 요소이기도 합니다. “21세기는 문화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되며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산업이다”라는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의 발언처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sup>16)</sup>

전자출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듯이<sup>17)</sup> 인문·문화 분야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기술의 발달이 여가를 확대하면서 문화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문화적 요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문화적·감성적 기준으로 상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농후한데, 문화적 요소가 중요해졌다면 국가 경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인문·문화·예술 분야를 활성화하는 관점을 수정해야 한다. 인문학이 존엄스러운 삶의 구현과 경제적 이익의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할 것이다.

문화산업이 문화적·정치적·경제적 등등 다방면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를 거두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문화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中國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내세운 ‘인문 올림픽’의 구호와 관련 볼거리들을 통해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16) 위행복, 「고전의 의미 - 東亞文化의 위상, 人間의 존엄」,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서울, 한중인문학포럼, 2017.11) 21-22쪽

17) 국민들의 독서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를 겸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 이미 거대한 규모로 저장되어 있는 지식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체적 전자출판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독자들이 상용하는 기기와 매체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출판산업이 변모해야 한다.

데, 중국은 자국 문화의 확산과 소프트파워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sup>18)</sup> 경제규모에 있어 미국에 버금가는 자리를 차지했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一帶一路’의 개념 속에도 문화의 확산을 중요한 항목으로 배치했으며,<sup>19)</sup>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중국은 이미 2013년에 세계 최대의 문화상품 수출국으로 성장했다.

유네스코가 10일 발표한 소속 통계연구소의 최신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2013년 문화상품 수출 총액이 601억 달러에 달해, 제2위인 미국의 279억 달러의 두 배를 훌쩍 넘었으며, 세계 최대 문화상품 수출국이 되었다.<sup>20)</sup>

중국이 세계 각국과 영화공동제작협정을 체결했고, 민영영화사인 화이브라더스가 미국 할리우드 소재 영화사의 스튜디오 지분을 매입했다거나, 상하이 동방미디어그룹이 월트디즈니와 영화 공동제작 및 콘텐츠개발에 합의했다거나, 완다그룹이 미국의 AMC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중국의 역량이 대폭 성장한 지금은 한중 간 문화교류 혹은 문화상품의 유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중국의 문화시장 규모는 거대하며, 최근의 ‘사드 사태’로 인해 중국으로의 문화상품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높은 가능성을

18) 정치와 경제와 안보협력이 국가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하드파워라면, 인문교류는 국민들이 친근감을 강화하고 마음을 소통하는 소프트파워이다.

如果說政治、經濟、安全合作是推動國家關係發展的剛力，那麼人文交流則是民衆加強感情、溝通心靈的柔力。(習近平, <共創中韓合作未來 同襄亞洲振興繁榮——在韓國國立首爾大學的演講>(2014年7月4日, 首爾)

<http://politics.people.com.cn/n/2014/0705/c1024-25241720.html>

19) 정치적 상호신뢰, 경제적 융합, 문화적 포용의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 책임공동체를 함께 만든다.(共同打造政治互信、經濟融合、文化包容的利益共同體、命運共同體和責任共同體)

20) 위행복, 「한·중 인문교류의 현황과 전망 - 한·중인문학포럼을 중심으로」(『中國語文論譯叢刊』第41輯, 2017.7.) 193쪽.

지닌 곳이기도 하다.<sup>21)</sup> 그러나 한국의 문화시장이 중국에 종속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 노정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sup>22)</sup>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하여 있는 한국으로서는 스스로의 문화정체성 확립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한중 문화교류에 있어 주목되었던 현상은 ‘韓流’인데, 가치관과 사유방식 등등의 유사성 때문에 한국의 콘텐츠나 문화상품이 비교적 쉽게 중국의 소비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한중 양국 문화종사자나 연구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즉 한중 간 ‘文化의 同源性’이 한류 형성의 근간이라는 것이다.

‘文化의 同源性’ 개념은 문화상품 소비의 근원을 주목하는데, 한국 전통문화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비롯되었고, ‘韓流’가 중국의 전통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동원성’ 때문에 조성될 수 있었다면, ‘漢風’ 혹은 ‘漢潮’로 부를 수 있을 중국문화 우위의 현상이 한국에서 쉽게 조성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앞으로는 ‘동원성’이 문화상품 소비의 방향을 뒤집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전통시대에 중국은 문화적 우위를 점하면서 문화발신국으로 존재했고, 스

21) (한국콘텐츠진흥원 강만석 부원장은) "중국의 콘텐츠산업은 2014년 약 1540억 달러 규모로 한국의 2대 콘텐츠 수입국"이라며 "연평균 10.6%씩 성장해 2016년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콘텐츠시장으로 발돋움하고 2019년에는 약 254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 부원장은 이와 함께 "최근 외교부가 발표한 '2014년 기준 한국에 대한 국가별 호감도 조사'에 따르면, 중국 국민의 66% 이상이 한국을 좋아한다"며 "한국 콘텐츠산업에게 중국은 반드시 협력하고 진출해야 할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한콘진 강만석 부원장 “중국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꿈의 시장”』, 『파이낸셜뉴스』 2015. 11. 1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511170895v?nv=0>

22) 방 의장은 양사의 전략적 제휴 체결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게임의 급성장으로 한국 게임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는 충격적인 진단과 함께 특히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현재 국내 구글플레이 매출순위 상위권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외산게임이 반년 후면 70%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외산게임의 중심 역시 중국게임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중국게임의 부상, '쫓기는 입장'에서 '쫓는 입장'이 된 한국 모바일게임』, 『게임포커스』 2015.03.09.)

<http://gamefocus.co.kr/detail.php?number=44552>

스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민족과 국가들이 중국에 흡수되기도 했으며, 무력으로 중국을 지배했던 민족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중국과 최근거리에 있는 한국은 앞으로도 중국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갈 것이니, 중국학계가 그 시야를 문화산업 발전과 한국의 문화정체성 확립으로까지 확대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 4. ‘材’와 ‘不材’의 사이

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인문학이 처한 위기가 단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996년에 발표된 국공립대 인문대 학장들의 「인문학 제주 선언」이 시초였는데, 그 후 2001년에 국공립대인문대학협의회가 「2001 인문학 선언」을 발표했고, 2006년에는 고려대 문과대 교수들이 「인문학 선언문」을 그리고 80여개 대학 인문대 학장들이 모여 「오늘의 인문학을 위한 우리의 제언」 등을 발표했다.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정부의 대책 수립과 지원 확대 요청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그러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부정책은 여전히 수립되지 않았다.

2012년 10월 26일에 출범한 한국인문학총연합회의 창립대회에서 발표된 「인문학 선언문」 역시 인문학이 처한 위기를 적시했는데, 인문학 본래의 영역 고수를 인문진흥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구적 합리성과 경제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세계 안에서, 인문학은 점차 본연의 역할을 상실해가고 있다. 좁은 분과 학문의 틀 안에 갇힌 인문학은, 그 근본정신은 망각된 채, 기술적(技術的) 지식의 형태로 변형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 인문정신을 상실한 인문학은 인문학의 위기 뿐 아니라, 인간의 위기를 초래하고 인간 역사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이제 우리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이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힘든 여정에 나서고자 한다.

‘도구적’ ‘경제적’ 가치의 잣대로 인문학을 가늠하는 시각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분과 학문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기성찰도 엿보이는데. 선언문은 말미에서 다음의 항목들을 강령으로 내세웠다.

1. 한국 사회는 인문정신의 회복에 힘써야 한다.
2. 한국 사회의 인문적 기반과 인문학의 발전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
3. 한국의 인문학자들은 한국의 풍부한 인문 전통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
4. 한국의 인문학은 세계의 다양한 인문 전통과 소통하고 타학문 분야와 소통함으로써 보편적 가치를 창조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친 학계의 요청과 자기 변화의 노력이 있었지만 한국의 인문학계에 닥친 위기적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악화 일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2, 2015학년도 4년제 대학의 학과별 입학정원 현황’에 따르면 인문계열 학과는 3년 전 976개에서 올해 921개로 줄었다. 불어불문학과 민속학과 철학과 유럽학과 등 55개가 사라진 것이다. 입학정원도 2012년 4만6108명에서 올해 4만2303명으로 3805명이 줄었다. 전체 정원이 감소했기 때문이지만 의약계열은 1616명이 늘었고 공학계열도 497명 증가하는 등 실용학문 계열 학과에서는 오히려 입학정원과 학과 수가 늘어나면서 대조를 이뤘다.<sup>23)</sup>

대학의 인문학 분야는 오랫동안 통폐합과 축소의 우선적 대상이 되었다. 교수요원조차 제대로 충원하지 못해 인문대학에서는 30, 40대의 젊은 교수를 찾아보기조차 쉽지 않으며,<sup>24)</sup> 인문학 분야 박사의 40%는 2,000만원 미만의

23) 「학과 취업률 높은 실용 위주로 재편... 인문계열 학과 3년 새 55개 사라졌다」, 『동아일보』 2015.09.17.,  
<http://news.donga.com/3/all/20150917/73674681/1#csidx8e3098d5f08b26b80d83863c7b939e7>

24) 대부분 대학들이 인문학 전임교수를 새로 뽑은 지 오래다. 인문학계에 30~40대 교수를 찾아보기 힘들다. 초임교수 평균 연령은 47~48세, 평균 연령은 60세 정도다. 정부

시간 강사 수입으로 살고 있다.<sup>25)</sup> 상황이 이러하니 인문계열에서는 학문 후속세대마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데,<sup>26)</sup> 문제는 학문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도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부추겼었다는 점이다. 2014,5년 무렵 “인구론”이니 “문송”이니 하는 용어들이 유행하고 인문계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보도들이 급증하더니,<sup>27)</sup> 급기야 2016년부터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 시작되었고, 지원대상 선정의 주요 요건은 인문대학을 비롯한 단과대학들의 정원을 덜어내 공대에 보태는 것이었다. 인문학에게 설상가상의 사태가 닥쳤고, 인문 역량의 원천이 고갈될 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그런데 대학 바깥의 상황은 달랐다. 한국연구재단이 2008년부터 시작한 ‘석학인문강좌’와 국립중앙도서관이 교보문고·조선일보와 공동주최함으로써 시작된 ‘길 위의 인문학’ 등 대중인문교육이 활발히 추진되고, 지방자치체나

가 대학에 산업 수요 중심 학과 개편을 부추기며 인문학 미래는 더 어둡다” ……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의 경우 이 사업을 위해 일부 인문계열 정원을 20%씩 이공계로 내놨다. 한양대의 한 교수는 “현재 있는 인문계열 교수는 자리를 보전하겠지만 신규채용은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인문학이 계륜?…교수 자리가 없다』, 『한국대학신문』 2016.07.10.)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1164>

25) 「박사 취업해도 별 볼일 없네\_인문사회 초임 평균연봉 2000만원…공학의 절반도 안 돼」, 『교수신문』 2017.02.1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11861>

26) 유기환 한국의대 프랑스어과 교수는 “80~90년대 인문계열 대학원 수가 30명 정도라 치면 지금은 2~3명 정도로 1/10정도 줄었다”고 토로했다.(『인문학이 계륜?…교수 자리가 없다』, 『한국대학신문』 2016.07.10.)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1164>

27) 조사 결과, 인문계(인문·상경·사회과학) 출신 절반이 넘는 55%가 ‘전공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 학과 선택에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인문계열 응답자 중 67.2%는 다시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금의 전공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답해, 학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다시 대학에 입학할 경우 ‘공학계열 학과를 선택하겠다’는 답변이 53.5%로 가장 높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62.8%를 차지했다.(『인문학, 취업시장에서 ‘찬밥’…대기업 이공계 편중 심화』, 『뉴스토마토』 2015.07.14.)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69607>



기업 혹은 민간단체들 역시 다투어 다양한 인문학 강좌나 관련행사들을 주최하고 있다. ‘인문학 최고 경영자 과정’에 기업경영자들이 몰리기도 한다. “인문학 열풍”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인문학을 찾는 대중들이 증가했고, 인문학 분야의 서적도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수요가 한껏 높아진 것인데, 정신적 위안을 갈구하거나 지적욕구를 해소하려는 시민들이 인문학을 찾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인문학 관련 강좌나 행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문학이 과연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하는 점이 의문스럽다. 지적 호기심 충족이 주된 성과일 것으로 보이는 인문학 프로그램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거나 저세술을 담고 있는 책들까지도 인문학의 외피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人文學 熱風’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조성되었는데,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리저리한 이득을 쟁기는 부정적 현상이 많이 노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젊은인문학도들은 한국 인문학계의 문제점 전반을 통렬하게 폭로했으며, 학계 바깥에서도 직설적인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sup>28)</sup>

인문학계의 문제점을 비판한 저술로는 최진석 등의 『불온한 인문학』(휴머니스트 2011), 오창은의 『절망의 인문학』(이매진, 2013)과 이원석의 『인문학 페티시즘 - 욕망과 인문의 은밀한 만남』(필로소픽, 2015) 등을 들 수 있다. 불온한 인문학은 ‘인문학 열풍’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발표되었는데, 비판성을 상실하고 스스로 소비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학계의 풍토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오창은은 대학과 학술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비판을 전개했으며, 이원석은 ‘인문학 열풍’이 진행되면서 빚어진 기형적 현상들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는데, 이들의 발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소비’의 대상이기를 거부하고 자본의 유혹을 견디면서 인문학의 본령을 지키려는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sup>29)</sup>

28) 위행복, 「고전의 의미 - 東亞文化的 위상, 人間의 존엄」,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 19쪽

대학인문학이 대학 바깥의 대중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대학의 연구성과를 확산시키는 것은 대학 바깥의 왜곡된 현상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젊은 학자들까지를 포함한 대학의 전문연구자들이 학교 바깥의 인문 소양 교육에 기여할 통로를 넓혀서, 지적 호기심 충족을 겨냥한 대중강좌나 인문학을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오락성 프로그램들의 범람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의 우수한 역량이 학교 바깥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임과 동시에 통렬한 자기진단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에게는 교육이 본원적이고 일차적인 영역이고, 전인교육의 학문으로부터 출발한 인문학에게는 더욱 그러하니, '교육'이 대학 바깥에까지 미칠 수 있는 길을 확대해야 한다.

인문학은 또한 시대의 변화에서 비롯된 새로운 요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인문학과 융합된 기술만이 인간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인류문화에 대한 소양과 인문적 상상력이 산업발전에 기여할 길이 넓어졌다. '실용적' 쓰임새는 인문학이 그 본령에 충실할 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인문학 열풍"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스스로의 본령을 소홀히 한다면 작금의 호황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간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거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시대를 맞아 인문학에게 거는 실용적 쓰임새를 굳이 외면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인문학에게 인간의 존엄성 수호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를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쓸모없음'과 '쓸모있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대처를 요구한다.

29) 박(노자) 교수는 "인문학이 대학 구조조정 1순위가 된 건 '돈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돈과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머리와 책만 있으면 되는 인문학은 큰돈이 필요하지 않아 자본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국가와 자본이 통제하기 힘든 인문학은 자본주의를 비판할 수 있고 '반란적'이다. 나치 정권이 자본론뿐만 아니라 소설까지 불태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인문학과 없애는 대학엔 미래가 없다』, 『부산일보』, 2015.07.17.)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0718000005>

장자가 산길을 가는데,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가 눈에 띄었다. 벌목하는 사람이 그 옆에 서 있었지만 베지 않았다. 그 까닭을 물으니 “쓸모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장자가 “이 나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천수(天壽)를 다할 수 있구나.”라고 말했다. 선생께서 산을 나와 친구의 집에서 묵었는데, 친구가 기뻐하면서 어린 종에게 거위를 잡아 삶으라고 시켰다. 어린 종이 물었다. “한 마리는 잘 올려대고, 한 마리는 그렇지 못하는데, 어느 놈을 잡을까요?” 주인이 말했다. “잘 올려대지 못하는 놈을 잡아라.” 다음 날 제자가 장자에게 물었다. “어제 산 속의 나무는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천수를 누릴 수 있었는데, 조금 전 집 주인의 거위는 쓸모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장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쓸모 있음과 쓸모없음의 사이를 택하겠다.”<sup>30)</sup>

쓸모없게 생각되어 세상이 방치했지만, 나무 스스로 무성히 자랄 수 있다면 중국에는 넉넉한 쉼터를 제공할 것이며, 세상에게 필요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쓸모를 내보이려고만 애쓴다면 일찌감치 베어져 온전히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쓸모’에 대한 기대를 너무 저버리면 존속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인문학을 ‘쓸모없는’ 영역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기도 하지만,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요청이 예전 같지 않기도 하다. 인문학의 ‘쓰임새’에 대한 기대가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으니, ‘材’와 ‘不材’의 조화에 관한 학계 차원의 토론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맺는 말

지금 한국에는 ‘인문학 열풍’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 없지 않지만 대학

30) 莊子行於山中，見大木枝葉盛茂，伐木者止其旁而不取也。問其故，曰：“無所可用。”莊子曰：“此木以不材得終其天年。”夫子出於山，舍於故人之家，故人喜，命豎子殺雁而烹之。豎子請曰：“其一能鳴，其一不能鳴，請奚殺？”主人曰：“殺不能鳴者。”明日，弟子問於莊子曰：“昨日山中之木，以不材得終其天年，今主人之雁，以不材死，先生將何處？”莊子笑曰：“周將處乎材與不材之間。”(山木)

의 인문학은 여전히 곤경에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을 국가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인문 진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 확대 및 제도 수립이 절실하다.

헌법 제127조는 과학기술 발전의 책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으며,<sup>31)</sup> 이는 「과학기술기본법」 등등 다양한 관련법 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규정은 거의 없으며, 인문학 진흥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는 「학술진흥법」의 일부 규정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인문 분야가 여전히 홀시되고 있는 것이다. 인문 분야에 대한 세상의 관심은 예전과 같지 않은데, 법체계 속에서는 여전히 인문학의 위상이 너무 낮은 것이니, 이제는 근본을 중시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인문 진흥’을 뒷받침할 제도 수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학 바깥의 “인문학 열풍” 현상에 근거하여 지금의 상황을 인문학 위기가 아니라 인문학 교수들의 위기라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대학인문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니, 인문학 진흥을 위해 학계가 감당해야 할 숙제도 많은 것이다. 대학의 인문학이 세상과 더 활발히 소통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이 부차적 성과라는 점을 늘 상기하면서 새로운 상황을 맞아 대두하기 시작한 기대를 외면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인문학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문학은 인간의 존엄성 수호와 정치·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목표를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술을 이용해 고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고, 인간친화적인 본질을 바탕으로 높은 가치적 성과까지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인문학 교육을 통해 휴머니즘을 가르쳐야 한다”는 다보스포럼 회장의 발언을 주목할

31)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필요가 있다.

인문학의 '위대한 쓰임새'를 인식시키는 것은 학계의 몫이다. 도구적 실용성에 매몰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을 외면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인문'을 공부하는 학문과 과학기술의 협업을 특징으로 하는 상황이 '쓸모있음'과 '쓸모없음'을 조화시키는 지혜를 인문학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하겠다.

### 參考文獻

- 오창은, 『절망의 인문학』, 서울, 이매진, 2013년
- 위행복, 「한·중 인문교류의 현황과 전망 - 한·중인문학포럼을 중심으로」(『中國語文論譯叢刊』第41輯, 2017.7.) 193쪽.
- 위행복, 「고전의 의미 - 東亞文化의 위상, 人間의 존엄」,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서울, 한중인문학포럼, 2017.11) 21-22쪽
- 이원석, 『인문학 페티시즘 - 욕망과 인문의 은밀한 만남』, 서울, 필로소픽, 2015년
- 최진석 등, 『불온한 인문학』, 서울, Humanist, 2011년
-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지음, 송경진 옮김,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서울, 새로운 현재, 2016년) 148- 149쪽
- 클라우스 슈밥,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기회」, 『4차 산업혁명의 충격』(클라우스 슈밥 외 26인 지음, 김진희 손용수 최시영 옮김, 서울, 흐름출판, 2016.) 28쪽

## Abstract

###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Prospect of Humanities - Between the Usefulness and the Uselessness -

Wee, Hang-bok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clude 'fusion of ICT and industry', 'substitution of simple and repetitive labor by autom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xpansion of human alienation'. That is why Klaus Schwab'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stablishing ideology and systems to alleviate alienation" and "White House Report \_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have focused on these problems.

In such a situation,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 can be a priority task in the field of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In a society where highly precise machines are operated, it is human beings to suppress people or put humanity in crisis. In order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to expand freedom and liberate mankind, man must be able to maintain reason, and design and realize life values and goals. However, in recent trends, even if interest and support for humanities have increased, "humanities frenzy" could not be used as a basis for development, and they chose to be a subject of "consumption" themselves, and serious reflection is needed.

Also, in the new situation of the future, humanities need to enlarge their scope. It is time to think about the concept of 'humanities and geography' and to pay attention to the cultural industry,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future industry. Humanities should not ignore 'practical use' while adhering to their own principles.

**Key words** :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ocial Safety Net, Human Alienation, Culture Industry, Convergence Research

투 고 일 : 2018. 1. 10. / 심 사 일 : 2018. 1. 15. ~ 2018. 2. 15. / 게재확정일 : 2018. 2. 20.